

민선7기 키워드는 #일자리 #경제 #청년 #복지확대

# ‘쁘라삐룬’보다 빠르게 민생 겉으로

(태풍7호)

## 출범! 민선 7기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일 시작됐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임식을 잇달아 최소한 후 민생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들의 정책 방향도 경제·일자리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배당·무상교복 등 복지 확대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 도시철도·일자리 ‘광주 르네상스 시대’ 온다

###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오전 시청에서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른 대비를 위해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전남도와 이해관계가 달린 군 공항과 방공포대 이전 문제, 최근 또 무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현안도 민선 7기 과제물이다.

이 시장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핵심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손잡고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짓기로 한 자동차 생산공장 건립은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현 대차와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민선 7기 이용섭호의 또 하나의 과제는 가장 민감한 현안이자 민선 6기 내내 잡음을 일으켰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다. 이 시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단이나 방식 변경 결정이 나오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원도심 발전·통일경제특구 향한 인천의 대항해

###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새로운 시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선 7기의 대항해를 시작한다.

민선 7기 인천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신도심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중구·동구·남구 등 원도심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한 채 쇠퇴하고 있다.

박 시장은 원도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시장 중 1명을 원도심 담당 부시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벼금가는 원도심 전담 총괄기구를 신설해 강력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때 위축된 대북 교류사업도 왕성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 인천 구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서해평화협력 청 설치, 유엔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인천·해주·개성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천시는 서해평화 공약 대부분이 국가 주도 사업이어서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 추진하되,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는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한 상인과 약수하며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지와 관련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 시장은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매립지 4자협의체’의 합의를 놓고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인천이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까지 받아서 서구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언제 종료할지 명확히 한 뒤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지자체 간 재협의를 하려면 4자 협의체 합의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신임 경기도 지사와도 다시 담판을 해야 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

## 한전·산단·기업·대학, ‘생명의 땅’ 전남으로 오라

###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29일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남군 문내면 선두마을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주문 했다.

/뉴스

정이 놓여있다.

열악한 일자리 환경으로 인재가 지역을 떠나고 지난해 사상 최초로 190만 명 아래로 떨어질 만큼 만성화된 인구 감소에 늙어가는 농·어촌에 과감한 대책을 제시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만만치 않다.

광주 군사·민간 공항의 전남 이전, 흑산 공항 건설, 한전 공대 유치 경쟁 등 현안도 산적했다.

답보 상태인 흑산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추진에 소극적인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해야 하고 공항 이전·한전 공대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한전과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knj@

## 이재명의 ‘성남형 복지’ 경기도 전역에 뿌리?

###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성패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성남형 복지’가 경기도 전역에 안착할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24세 청년배당’,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3대 기본복지정책은 취임과 함께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 사정이 제각각인 경기도 관내 31개 기초단체의 서로 다른 ‘토양’에 부자동네 성남의 복지모델이 제대로 이식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지 주목된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도 시도된다.

18살이 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구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취업 시 소금납부가 가능해 연금혜택 보장이 많아지게 된다.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도 도모 한다.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3대 기본복지(1조2709억원), 생애 생초 국민연금(588억원), 지역화폐 유통(712억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4년간 1조4000억원이 넘는다.

기준 예산 조정 외에 연정(聯政)사업 조정(4000억원)과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4000억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연정사업 조정은 벌써부터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원의 지역구 관련 사업이 상당수인 데다 주민 설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비상대책회의에 앞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취임식을 여는 만큼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남북 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를 통한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은 이 지사가 내세운 첫 공약이지만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수라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통일경제특구를 희망하는 시·군이 많아 선정작업부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김승열 기자 kimsy@